‘일심회’ 수사 주말이 분수령

국정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압수수색·계좌추적도 확대

국정원은 2일 ‘일심회’ 조직원으로 지목한 장민호(44)씨 등 3명의 구속 수사 기간을 늘려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국정원은 나머지 구속자 2명에 대해서도 3일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심회 조직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북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공작금의 흐름 파악을 위한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도 늘릴 방침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장씨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USB 저장장치,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국정원은 압수물 분석에서 나오는 단서를 근거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피의자들이 단식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다 장씨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번 주말이 시한인 구속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장씨의 대북 보고 문건을 분석하고 암호문 등을 해독하면서 이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올해 3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출판한 영어교재의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했고 손정목(42)씨 역시 학원사업의 중국 진출을 타진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말하는 등 구속된 피의자들이 모두 공작원 접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민호씨 지인들 ‘의혹’ 전면 부인

“간첩이라는 사실 전혀 몰랐다”

고정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의 메모에 이름이 등장했거나 장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언론에 거명된 장씨의 지인들은 한결같이 “장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들은 장씨를 오랜 친구 또는 대학 동문 등으로 알고 지냈거나 IT 전문가로 소개 받아 만났을 뿐이고 포섭 시도 등 이상한 낌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믿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장씨의 메모에 이름이 적혀 ‘포섭 대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전 국회의원 측근 P씨는 2일 “장씨는 말 그대로 오랜 친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P씨는 “장씨 외에 이정훈·최기영·이진강·손정목씨 등 구속된 국보법 위반 피의자들의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P씨는 한나라당 김모 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1992~1993년 미국에서 귀국한 장씨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으며 2-3년 간격으로 만났다, 연락이 끊겼기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의 동생인 김승규 국정원장이 서울지검 형사부장이던 1992년 김 원장과 함께 보좌진들이 식사를 하고 2~3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P씨처럼 메모에 이름이 올라 있지는 않지만 여당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장씨를 만났다는 S씨는 1999년 말~2000년 초쯤 미국에서 귀국해 나래디지털엔터테인먼트에 근무하던 장씨를 IT 전문가로 알고 처음 만났던 것으로 기억했다.

S씨는 장씨가 유능한 IT 전문가이면서 동문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돼 IT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만남을 이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승규 前국정원장 고소

일심회 피의자 변호인단

장민호씨 등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 5명의 공동변호인단은 2일 오후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김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일심회’ 사건 피의자 1명마다 2천만원씩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원장이 공판 청구 이전에 구속자들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고 간첩이 아니거나 간첩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간첩’이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해 구속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노당 김일성 생가 방문 논란

한나라 “저의가 뭐냐” 우리당 “통상적 코스”

오늘 김영남 위원장과 면담 예정

만경대에서…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이 지난달 31일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있다. 〈조선중앙TV촬영〉

평양을 방문중인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방북 첫날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가를 방문한 사실이 북한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 사정상 방북 소식을 하루 지난 뒤 서울에 알려오고 있는 민노당 방북단이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일정을 소개하면서 조선 사민당과의 만찬사실만 전하고 김 주석 생가인 ‘만경대’ 방문 사실은 알리지 않은 것. 누락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핵실험과 ‘간첩단 수사’ 파문 속에 ‘고의적 은폐’가 아니냐는 빌미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2일 “민노당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사절단으로 방북한다더니 김일성 생가부터 방문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방북활동을 브리핑하면서 만경대 방북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이유가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서인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 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햇볕정책’의 원조인 민주당의 이상열 대변인도 “김일성 생가 방문은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유보적이었다.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현 시기에 만경대를 방문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평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통상 들르는 코스”라고 말했다. 또 생가방문 누락에 대해선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며 논평을 자제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공안당국, 일부 보수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노당은 우선 이번 간첩의혹 수사를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김승규 국정원장을 구속자 가족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소장에서 김 원장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금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엄수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으며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허위보도 및 인권 침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했다”며 내주중 언론중재위 제소와 손배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민노당 지도부는 3일 북한의 권력서열 제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관계자는 2일 “3일 평양 일정 중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리, 딸과 데이트하다.

영업안내 11/3(금)~11/5(일)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합니다.

Life Stylist 현대백화점 HYUNDAI

현대백화점 창사 35주년 축하
구매 고객께 사은상품권을 드립니다
증정기간 : 11/3(금)~12/31, 10일간 증정장소 : 8층 사은플라스크

증정방법 : 당일 현금/카드/상품권 구매 영수증에 한하여, 본인 영수증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룹 행사와 중복하여 증정하지 않으며, 합산한 영수증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만 해당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험/기전제품만 소형가전은 100% 인정/사은품/설프유통/학기유는 구매금액의 50%만 인정합니다.

증정 제외대상 : 양곡/상품권/문화센터/여행사/임대매장/식도가/위탁매장/인정점/일부 매장은 제외됩니다.

모피/가전·가구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증정기간 : 11/3(금)~12/31, 10일간 증정장소 : 8층 사은플라스크

※ 모피제품에 한하여 합산 가능합니다. ※ 기전 제품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하여 증정합니다. ※ 가전/가구 모피 상품권간 구매 영수증은 합산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